

공 개



의안번호	제 51 호	보 고 사 항
보 고	2023. 12. 6.	
연 월 일	(제 21 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개정결과 보고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3. 12. 6.

1. 보고주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의 개정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를 개정('23. 9. 15.의결)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3. 주요내용

3. 주요골자

가. 개정 배경

☐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관련 규정이 불명확

* K-IFRS에서는 '20년과 '23년 두 차례 K-IFRS 제1001호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함

❶ 기존 차입약정(조건)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동(문단 2.22(3)*)·비유동(문단 2.25*) 분류가 불명확

* 2.22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중략)

(3)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 2.25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❷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판단할 때 약정사항 준수시점에 대한 실무상 혼란 존재

❸ 부채 결제의 의미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실무상 다양한 회계처리가 발생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권리'의 명확화

- 부채의 유동부채 분류 원칙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 삭제(문단 2.22(3))
- 부채의 분류는 경영진의 의도나 기대 및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 받지 않음(문단 2.25 및 문단 2.27의2)

②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대한 판단기준 추가 및 공시 요구

- (판단기준) 약정사항이 존재하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판단할 때, 약정 준수시점 고려 (문단 2.22의2, 3)

구 분	내 용
①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그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약정사항을 충족 →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존재 * 약정사항의 준수여부를 보고기간 이후 평가하는 경우 포함
② 보고기간종료일 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권리 존재 여부 판단 시, 해당 약정사항의 충족여부를 미고려

- (공시)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약정사항 준수를 요하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 시, 부채의 결제 위험에 관한 정보
 -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 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
-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

③ '부채의 결제의 의미와 결제 방식' 구체화

- (결제) ①현금 이전, ②재화나 용역 제공, ③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
 - 다만,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조건(예: 전환권 매도)은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논의 결과('23.11.24.), 원안대로 접수

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및 소급적용

4.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와 관련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회계처리가 가능
 - 전환권 관련 부채의 분류*를 제외하고는 일반기준과 K-IFRS의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가 일관

* K-IFRS 제1001호 규정을 참고하여 일반기준 제2장을 개정하였으나, 전환권 분류에 대한 K-IFRS와 일반기준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일반기준을 개정

라.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와 관련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회계처리가 가능해지고, 전환권 회계처리*를 제외하고는 일반기준과 K-IFRS의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가 일관되게 됨

* K-IFRS 제1001호 규정을 참고하여 일반기준 제2장을 개정하였으나, 전환권 분류에 대한 K-IFRS와 일반기준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일반기준을 개정하여 실무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현행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이므로 기업과 이용자에게 특정한 비용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해야 하므로,
 - 정보이용자는 주석을 통해 비유동부채가 1년 이내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함
 -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시를 요구하므로, 기업의 공시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개정경과

☐ 2023. 7. 7. 개정 공개초안 의결(회계기준위원회)

☐ 2023. 7. 10. ~ 2023. 8. 7.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금융감독원 등)

☐ 2023. 9. 15.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나. 제4차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서면보고(2023.11.24.)

다. 관련법규(붙임1)

<별지>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2023년)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3. 9. 1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문단 2.22(3), 2.25, 2.26, 2.28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문단 2.22의2, 2.22의3, 2.27의2, 2.28의2, 2.28의3, 2.28의4를 추가하였음.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음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

2.22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1)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 (2)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 (3)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이 경우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자본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2의2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2.22의3~2.2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한다.

2.22의3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

- (1)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2.22(3)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더라도(예: 약정사항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하지만,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는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 (2)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예: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6개월 후 재무상태에 기초한 약정사항),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2.22(3)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5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나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약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6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27의2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단 2.22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채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 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2.28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장기채무로와 차환한 경우(또는 만기 연장)
- (2)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
- (3)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차입약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채권자로부터 획득한 경우
- (4) 비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결제한 경우

2.28의2 문단 2.22~2.27을 적용할 때, 차입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문단 2.22의3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 (1)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2)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예를 들어,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2.28의3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1) 또는 (2)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1)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 (2)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2.28의4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2.28의4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부록

결론도출근거

결2.16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2023년 9월에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문단 2.22(3), 2.25, 2.26, 2.28을 개정하고, 문단 2.22의2, 2.22의3, 2.27의2, 2.28의2~4를 추가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2020년 10월 개정)와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2023년 3월 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에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부채 결제의 의미와 결제 방식을 명확히 하고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기 위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였다.

결2.17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 전 문단 2.22에서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하였으나, 개정 전 문단 2.25에서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기술되어있어 두 문단이 상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단 2.22(3)의 분류 원칙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부채를 분류할 때 권리의 행사 가능성과 경영진의 의도나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련 문단을 개정하였다. (문단 2.22(3), 2.25, 2.26, 2.27의2)

결2.18 기업이 약정사항의 준수를 전제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그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시점에 대하여도 고려하였다. 해당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에 존재하는 지 판단할 때 그 약정사항을 보고기간 후에만 준수하면 된다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약정사항의 준수여부가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문단 2.22의2와 2.22의3을 신설하여 약정사항의 준수를 요구받는 시점을 고려하여 연기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문단 2.22의2, 2.22의3)

결2.19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문단 2.28, 2.28의2)

결2.20 회계기준위원회는 부채의 결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이 있으므로 부채의 결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단 2.28의3에서 결제의 유형을 정의하고, 문단 2.28의4에서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기술하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상품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자본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에 지분상품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채로 분류한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에서는 금융상품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자본요소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문단 15.20, 실15.5, 실15.6). 따라서, 자본요소로 분류된 전환권은 관련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단 2.28의3, 2.28의4)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소제목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3. 9. 15.)'과 문단 1~3을 추가한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3. 9. 15.)

시행일

- 1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23년,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따라 문단 2.22(3), 2.25, 2.26, 2.28을 개정하고, 2.22의2, 2.22의3, 2.27의2, 2.28의2, 2.28의3, 2.28의4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경과규정

- 3 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일반기준 제2장	(개정안) 일반기준 제2장
<p>2.22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p> <p>(1)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p> <p>(2)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p> <p>(3) <u>보고기간 후 1년 이상</u> <u>결제</u>를 연기할 수 있는 <u>무조건</u>의 <u>권리를</u>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이 경우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2.22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p> <p>(1)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p> <p>(2)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p> <p>(3) <u>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u>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u>권리를</u>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p> <p style="text-align: right;">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p> <p>2.22의2 <u>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2.22의 3~2.2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한다.</u></p> <p>2.22의3 <u>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u></p> <p>(1) 만약 기업이 <u>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u></p>

(현행) 일반기준 제2장	(개정안) 일반기준 제2장
	<p><u>한 약정사항은 문단 2.22(3)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더라도(예: 약정사항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하지만,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는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u></p> <p><u>(2)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예: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6개월 후 재무상태에 기초한 약정사항),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2.22(3)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u></p>
<p>2.25 <u>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u></p>	<p>2.25 <u>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u>보고기간종료일 현재</u>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약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u></p>
<p>2.26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p>	<p>2.26 <u>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종</u></p>

(현행) 일반기준 제2장	(개정안) 일반기준 제2장
<p>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p> <p><신설></p>	<p>료일과 채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u>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u></p> <p>2.27의2 <u>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단 2.22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채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채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채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 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u></p>
<p>2.28 보고기간종료일과 채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한다.</p> <p>(1) 장기채무로의 차환(또는 만기연장)</p> <p>(2) 차입약정 위반의 해소</p>	<p>2.28 보고기간종료일과 채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한다.</p> <p>(1) <u>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장기채무로 차환한 경우(또는 만기연장)</u></p> <p>(2) <u>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u></p>

(현행) 일반기준 제2장	(개정안) 일반기준 제2장
<p>(3) <u>차입약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획득</u></p> <p><신설></p>	<p>(3) <u>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채권자로부터 획득한 경우</u></p> <p>(4) <u>비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결제한 경우</u></p> <p>2.28의2 문단 2.22~2.27을 적용할 때, 차입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문단 2.22의3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p> <p>(1) <u>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u></p> <p>(2) <u>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예를 들어,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u></p>

(현행) 일반기준 제2장	(개정안) 일반기준 제2장
<신설>	<p><u>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u></p>
	<p><u>2.28의3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1) 또는 (2)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u></p> <p><u>(1)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u></p> <p><u>(2)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2.28의4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u></p>
	<p><u>2.28의4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p>
	<p><u>결2.16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2023년 9월에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문단 2.22(3), 2.25, 2.26, 2.28을 개정하고, 문단 2.22의2, 2.22의3, 2.27의2, 2.28의2~4를 추가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2020년 10월 개정)와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 부채’(2023년 3월 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에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부채 결제의 의미와 결제 방식을 명확히 하고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기 위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였다.</u></p> <p><u>결2.17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u></p>

(현행) 일반기준 제2장	(개정안) 일반기준 제2장
<p><신설></p>	<p><u>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 전 문단 2.22에서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하였으나, 개정 전 문단 2.25에서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기술되어있어 두 문단이 상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단 2.22(3)의 분류 원칙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부채를 분류할 때 권리의 행사 가능성과 경영진의 의도나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련 문단을 개정하였다. (문단 2.22(3), 2.25, 2.26, 2.27의2)</u></p> <p><u>결2.18</u> 기업이 약정사항의 준수를 전제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그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시점에 대하여도 고려하였다. 해당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에 존재하는 지 판단할 때 그 약정사항을 보고기간 후에만 준수하면 된다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약정사항의 준수여부가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문단 2.22의2와 2.22의3을 신설하여 약정사항의 준수를 요구받는 시점을 고려하여 연기 권</p>

(현행) 일반기준 제2장	(개정안) 일반기준 제2장
<신설>	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문단 2.22의2, 2.22의3)
<신설>	<p><u>결2.19</u>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문단 2.28, 2.28의2)</p>
<신설>	<p><u>결2.20</u> 회계기준위원회는 부채의 결제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이 있으므로 부채의 결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단 2.28의3에서 결제의 유형을 정의하고, 문단 2.28의4에서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기술하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상품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자본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에 지분상품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채로 분류한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에서는 금융상품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자본요소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문단 15.20, 실15.5, 실15.6). 따라서, 자본요소로 분류된 전환권은 관련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단 2.28의3, 2.28의4)</p>
<신설>	시행일

(현행) 일반기준 제2장	(개정안) 일반기준 제2장
<p><신설></p> <p><신설></p>	<p><u>1</u> <u>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23년,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따라 문단 2.22(3), 2.25, 2.26, 2.28을 개정하고, 2.22의2, 2.22의3, 2.27의2, 2.28의2, 2.28의3, 2.28의4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p><u>2</u> <u>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u></p> <p><u>경과규정</u></p> <p><u>3</u> <u>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u></p>

관 련 법 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③ (생 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⑦ (생 략)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⑦ (생 략)

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 ①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 략)

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4. (생 략)

5. 법령 또는 고시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회계 또는 외부감사 관련 기준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제29조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영 제46조에 따른 회계전문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면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업무에 임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자본시장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세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⑤~⑩ (생략)

제4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이 위원장에 부의를 요청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⑬ (생략)

제5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한국회계기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제·개정 내용 및 외부 의견청취 결과
 2. 제1호와 관련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의사록
- ②~③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락처	02-2100-2695